

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 위한

재정준칙 도입방안



기획재정부



한국형 재정준칙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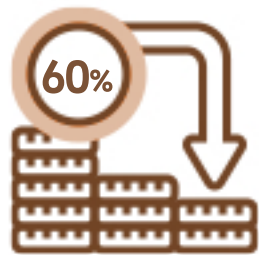
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재정준칙 설계

한도 계산식

$$\left\{ \frac{\text{국가채무비율}}{60\%} \right\} \times \left\{ \frac{\text{통합재정수지 비율}}{-3\%} \right\} \leq 1.0$$

*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상회할 경우 통합재정수지를 -3%보다 축소하여 기준 충족

도입전략1: **준칙성**



국가채무 비율 기준을 60%로 설정

현재 국가채무 수준,
중장기 전망,
고령화 속도 등 감안



통합재정수지 기준을 -3%로 설정

국제기준에 맞추어
사회보장성기금*까지 포함한
‘통합재정’ 관점에서
재정 관리

*(국민연금, 사학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

한도 초과시 재정건전화 대책 마련 의무화

지출 효율화, 수입 증대 등
국가채무, 재정수지에 대한
구체적인 관리방안
포함

도입전략2: 보완완성



위기시 적용 면제, 이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공제 후 점진 가산

- 전쟁·대규모 재해·글로벌 경제위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, 한도 적용을 면제
- 위기 대응에 따른 채무비율 증가분은 한도 계산시 1차 공제 후
3년에 걸쳐 25%씩 가산해 나가고, 4년차부터는 전부 반영

*채무비율 증가분 반영 비율: (위기시)0%, (1년차)25%, (2년차)50%, (3년차)75%, (4년차~)100%



경기둔화시 통합재정수지 기준 완화

- 경기둔화 판단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%p 완화하여 경기대응 뒷받침

-3 → -4%

도입전략3: 실효성



**코로나 상황의
불확실성 등을 감안
'25회계연도 부터
적용**

유예기간 동안
재정건전성 개선
노력을 통해
재정준칙 이행 담보



**한도는
시행령에 위임,
5년마다 재검토**

환경 변화에 대한
대응력 제고를 위해
산식 등 수량적 한도는
시행령에 위임하고
5년마다 재검토



**재정건전화
추진을 위해 필요한
제도적 장치 보강**

재정부담 수반
법률안 제출시
구체적 자원조달방안 첨부

초과세수 등 발생시
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
사용해야 하는 비율 확대

30 → 50%